

### 검찰, 공소사실만 47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 ‘사법농단 정점 vs 적폐청산 희생양’ 법정의 진실은?

직무유기 등 직권남용 혐의 41개  
日 강제징용 손해배상 등에 나서  
박병대·고영한 ‘부당지시’ 가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순진영 기자 son@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오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수장 출신 인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직권남용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이 이날 밝힌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47개에 이른다. 이중 직권남용 혐의만 41개를 차지한다. 그는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

간 박·고 전 처장과 임 전 차장 등에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상고심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에 나섰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 9월~11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 지연 방안 등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병대 전 처장이 개입하기 시작한 2014년 11월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 자료가 포함된 문건 작성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12월에는 청와대·외교부의 청구기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제출 도입’을 지시하고 전범기업 측 변호사, 주심 대법관 등과 외교부 의견서의 재판부 제출 방법을 사전 조율했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한 부당 지시도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파견 부장판사에게 현재 심리 사건과 현재 소장, 재판관 동향 등 325건을 수집·보고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 역시 표적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 임 전 차장은 2013년~2017년 정기인사에서 인사심의관에게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시켜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양 전 원장은 설 연휴 마지막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후배 판사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발언한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양 전 원장 측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대법원장에게 없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커 법리다툼도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이병준 기자 joker@metroseoul.co.kr

## 文 대통령 지지율 11주만에 50%대 회복

긍정평가 전주보다 1.6%p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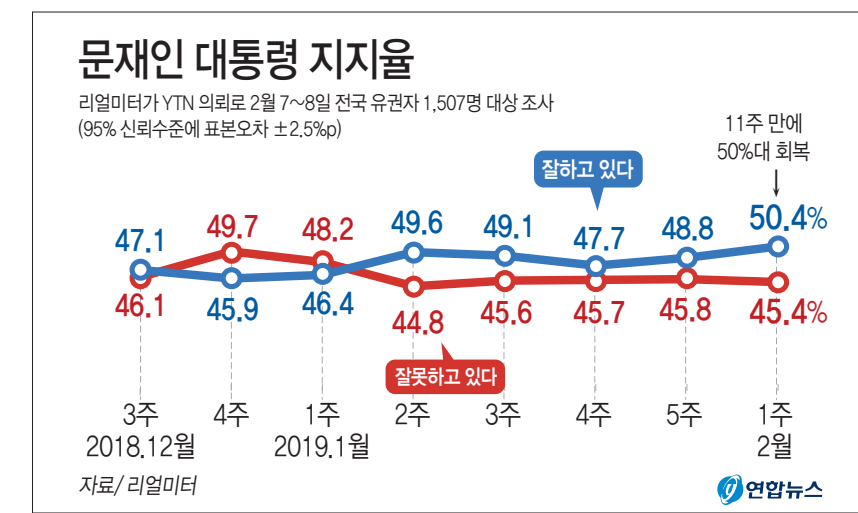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1주만에 5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지난 8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2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6.8%)'를 조사해 1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6%p 오른 50.4%다.

이는 2주 연속 지지율 상승세임은 물론, 작년 11월 3주차(52.0%) 후 11주만에 50%대 지지율을 회복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0.4%p 내려간 45.4%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50%대 회복 관련 "작년 말부터 본격화한 경제활



성화 및 일자리창출 노력이 꾸준히 지속됐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북미 실무협상 소식 등 한반도 평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오른 38.9%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1.5%p 오른 28.8%를 기록했다.

/우승준기자 dn11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립뉴스

## 도심 수소차 충전소 등 '규제 샌드박스'

산업부, 규제특례심의회 열어

정부가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차용한 용어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4건이며 대부분 기업 신청대로 통과됐다.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

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작년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보급될 지역이라 대상에서 제외되되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기초수급자 사회복지무요원 '알바 허용'

병무청, 기술·행정병 지원맨 가산점

병무청은 올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를 위한 맞춤형 병역이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병무청은 11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육·해·공군 기술·행정·유급지원병 등에 지원하면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면서 "사회복지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퇴근 후 아르바이트 등 겸직(영리활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병적 분류상 현역인 상근예비역은 사회복지무요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을 하지만, 퇴근 후 겸직 허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근예비역에 대한 겸직 허용을 국방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예비역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

근예비역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은데, 상근예비역은 2차관리가관이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라면서 "국방부도 이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대상자들 중 1999년생 고졸 또는 졸업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역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올해 입영을 희망하는 달에 군입대할 수 있도록 우선 반영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시 고졸이하의 학력제한을 대학생 재학생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병무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희망하는 지원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

## 청년창업농 2981명 신청 농식품부, 총 1600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2981명이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 중 시·군단위 서면평가를 진행해 시군별 사업대상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3월 중 시·도단위 면접평가를 거쳐 4월에 1600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의 신청자가 가장 많았고, 경력별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가장 많았다.

최종 선발된 청년창업농 1600명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농의 희망에 따라 창업자금, 농지, 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 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해수부 '천일염산업 발전방안' 마련·추진

정부가 천일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의 효율적인 생산 기반 구축, 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은 해수부가 '소금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제2차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2019~

2023)으로 그 범위는 품질관리, 안전성조사, 생산·제조 및 산업육성 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천일염으로 한정했다.

이번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은 '천일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비전 아래 ▲ 고부가가치 천일염의 효율적 생산기반 구축 ▲ 천일염 생산자 체질 강화 및 수급관리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